

유럽통합의 전개와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

고 성 준*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유럽통합의 추진
- III. 유럽통합의 과제와 교훈
- IV.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실과 과제
- V. 맺음말

I. 들어가며

2004년 6월 19일은 유럽에 있어 20세기 막바지부터 진행되어온 유럽통합의 심화가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정치적 통합체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지난 5월 동유럽 10개국이 회원국이 되면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EU)은 6월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25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가지고 EU 헌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EU를 대표하는 2년 6개월 임기의 대통령과 통합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같은 임기의 외무부장관직 신설과 이중다수결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EU 헌법안의 확정으로 고유의 영토와 언어·문화를 가진 유럽의 25개 주권국가 국민 4억 5000만 명이 단일국가처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의 외교안보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외교적 실체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 모두가 자국의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인준과정이 간단치 않다. 국민투표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영국과 같은 일부 회원국의 경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우 부정적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최종 발효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채택을 거부하는 회원국이 발생되어도 그 국가가 EU에서 퇴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정치적 통합체로서의 EU는 유지될 것이다.

이어 EU의회와 EU집행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논란 끝에 이슬람국가인 터키와 가입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유럽통합은 '인류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세기'를 겪은 유럽인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 즉 전쟁의 방지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합노력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 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면서 주로 경제분야에 국한되어 왔다. 사실 일부 국제정치학자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정치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아직도 주권국가인 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정치·외교·안보분야에서의 유럽통합은 거의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은 단일시장과 단일통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경제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치공동체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정치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EU의 행진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사적 흐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전환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어떤 형태로든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으로 응전되고 있다.

II. 유럽통합의 추진

1. 기원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후반 프랑스의 외무부장관 브리앙(Aristide Briand)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세계대공황과 영국을 선두로 한 유럽 국가들 일부의 반대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미소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을 때인 1946년 후반 스위스 취리히에서 처칠이 유럽합중국창설을 제창하여 수많은 유럽 단체들과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부각되었다. 당시 유럽인들은 미·소 중심의 냉전에 대항할 제3세력이 대안으로 필요하였고, 유럽이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여 자유로운 정치권리와 사회개혁을 이룩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경제통합으로 단일시장을 결성하여 산업규모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¹⁾

그러나 당시로서는 유럽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전체가 폐허의 상태로 심리적인 위축감과 무력함에 빠져 있었고,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무엇보다도 국가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냉전체제가 고착되면서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 안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전후 유럽은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국가 간에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요구되어 유럽연합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외무부장관 슈망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이미 프랑스의 경제계획 총장이었던 모네는 유럽에서 전쟁을 막고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모네의 이 안을 구체화시킨 슈망플랜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초국가적 협력체인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켜 전쟁을 방지하고,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범하였다.

이 플랜은 2차 세계대전 후 산업복구와 발전의 에너지인 철강과 석탄을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참여국의 정치적 입장은 제각기였다. 프랑스는 향후 유럽에서의 전쟁방지를 위해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공동체의 틀 안에 묶어놓는다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후 패전의 부담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디딤돌로 석탄철강공동체가 의미가 있었다.²⁾

슈만플랜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지지에 의해 1951년 파리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³⁾를 출범시켜 유럽통합을 이룩할

1) 이주영 외, 「서양현대사, 제2차 세계대전에서 현재까지」, 서울, 삼지원, 1997, pp. 173-175.
 2) 김남국, “유럽통합과 민주주의의 전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권, 2004, p. 284.
 3)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는 프랑스·독일·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유럽공동체」까지

슈만플랜을 거부했던 국가는 영국이었고, 특히 노동당 출신의 애틀리 수상이 반대하였다. 그는 슈만플랜을 민주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영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초국가적 정부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⁴⁾

1953년 2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참여 6개국은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원자재 교역에 대한 관세와 교역량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참여국 사이의 무역이 증가하였고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질서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산업분야로만 제한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발전하면서 경제적·정치적 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1955년 베네룩스 3국은 경제공동체를 제안했으며, 그 후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 「유럽경제공동체」(EEC)⁵⁾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⁶⁾가 출범하게 된다. 유럽경제공동체가 창설되면서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교류 확대와 유대관계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유럽의 공동시장화는 관세동맹과 자본,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져왔다. 유럽에서 거대 단일시장 형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유럽국가 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활동이 촉진되었으며, 민족주의가 극복되어 유럽이라는 경제공

탈리아와 베네룩스의 6개국이 1951년 4월18일에 조인한 ECSC 창설조약의 의해 실현되었다. ECSC는 가맹국간의 석탄과 철강의 생산 및 판매 공동관리 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유럽통합의 초석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 4) Derek W.Urwin, 노명환 역, 『유럽통합사』 (서울: 대한교과서, 1996), pp. 71-75, 백래식, "유럽질서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김계동외, 『유럽질서의 이해』, 서울, 오름, 2003, P.179
- 5)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1958년 4월 ECSC회의에서 기본조약이 기초되고, 1957년 3월 로마에서 EURATOM조약과 함께 조인된 EEC설립조약에 의거하여 1958년 1월에 발족하였다. EEC의 설립목적은 관세동맹결성, 수출입제한 철폐, 역외제국에 대한 공동무역 정책의 설정, 역내의 노동력·용역·자본이동의 자유, 공동농업정책의 수립 등이다.
- 6)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는 1957년 3월 로마에서 EEC조약과 함께 조인된 EURATOM 조약에 의거하여 1958년 1월에 발족되었다. 목적은 공동에너지 시장의 창설, 핵연료의 균형공급 보장, 핵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초국가적 관리 등이다.

동체가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⁷⁾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와 진전은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가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하고, 1981년 그리스에 이어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게 되었다. 유럽공동체는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연합(EU)을 탄생시켜 15개국에서 인구 3억 8,000만 명을 가진 경제·문화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3. 문화공동체로서의 EU

석탄철광공동체로 시작된 유럽의 공동체 건설이 경제공동체를 거쳐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가 유럽공동체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문화공동체의 형성이 뒷받침되었다. 유럽은 각국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쌓여진 분신과 문화적 괴리감으로 심각한 문화적 분열 속에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공동체 수립과정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신뢰, 상호인식을 통하여 공통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기도하였다.⁸⁾

문화공동체로서의 유럽공동체는 고대 그리스 유산과 기독교 유산에 기초하지만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이 주효했다. 1993년 11월 1일에 체결된 마스트리트(Maastricht)조약의 2개 조항은 유럽공동체가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을 언급하고 있다.⁹⁾ 제3조는 회원국의 문화창달을, 제15조는 '문화 2000', '유럽문화도시'(ECC: European City of Culture), 유럽문화의 달 활동(European Cultural Month Action)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함을 뜻한다.

7) 백래식, 전계서, P. 180.

8) 루드거 퀴하르트, "문화공동체 형성: 유럽-문화적 소통의 통일구축",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국제회의 자료집」, (인문사회연구회주최 통일연구원 주관, 2004. 10. 25), pp. 62-63.

9) 김명섭,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적 문화공동체", 상계서, pp. 179-180.

유럽연합이 문화공동체 수립을 위해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와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사업의 경우, "문화 2000" 프로그램은 유럽 각 국가 간의 문화적 대화 추진, 역사적 지식 축적, 유럽문화의 창조 및 전파, 예술가들과 작품들의 교류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도 유럽연합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정보네트워크(ERUDYCE: Education Intormation Network) 사업은 유럽연합내의 고등교육기관간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자는 것이고, 소크라테스사업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외국어능력향상,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지식유럽의 창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¹⁰⁾ 이 밖에도 유럽역사 교과서 만들기와 유럽공동의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추진 그리고 젊은 이들이 모국이 아닌 여타 회원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통하여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4. EU의 확대와 정치통합체로의 행진

유럽연합은 「석탄·철강공동체」때부터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 온 것이 아니었다. 포용과 배제의 원리가 분명한 냉전의 시대 속에서 유럽연합에 이르렀기에 동유럽 국가들의 수용을 전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에서 공산당체제가 변혁으로 무너지는 탈냉전시대 하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문제는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¹¹⁾

새롭게 출발하는 동유럽의 국가들은 서유럽에서 유럽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될 긍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고 EU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게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통제체제를 버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들 나라들은 불가리아에서 슬로베니아까지 10개국이었다. 지난 90년대를 걸쳐 유럽연합은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유럽연합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갖고 교류·협력을 하였으며 가입신청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2004년 5월 1일 동유럽 10개국이 가입하여 EU회원국 수는 25개국이 되었으며, 인구는 4억 5천만 명이 되었다. 6월 17일에는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렸고,

10) 상계논문, pp. 180-181.

11) 이규영, "지구화와 유럽통합", 박광희편, 「21세기의 세계질서」, 서울, 오름, 2004, P. 374.

EU헌법안이 채택되어 명실상부한 정치적 통합체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연합(EU) 헌법안 채택은 그동안 '경제 대국, 정치 난쟁이'로 불리는 지위를 겪어야 했던 EU가 경제 통합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정치적 통합체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한다.

고유의 영토와 언어·문화를 가진 유럽의 25개 주권국가 국민 4억5000만 명이 하나의 규범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명제를 현실로 만든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로서 EU의 정치적 통합의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EU 헌법안 확정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주요 정책 수립에 있어 다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만장일치 제도를 비롯한 EU의 대부분 제도와 기구는 1951년 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킬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15개 회원국으로도 빠져거리기 일쑤던 이 같은 틀을 가지고는 25개국으로 확대된 EU가 도저히 가동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 헌법안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50%와 전체인구의 60% 이상 지지를 얻어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안이 마련됐다¹²⁾. 그러나 프랑스·독일·영국 등 몇몇 대국들의 전횡을 우려하는 중소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은 가결 기준을 회원국 55%와 인구 65%로 높였다.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의 신설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헌법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한 EU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자리다. 대통령은 EU의 수반이며, 외무장관은 25개 회원국을 대표해 대외정책을 책임지게 된다.

2006년 헌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 모두가 자국의 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인준과정이 간단치 않다. 일부 회원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2005년 2월부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10개국이다. 이중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비준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투표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영국의 경우 헌법안 채택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다수여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터키의 EU 가입에 따른 경제심리와 무슬림에 대한 반감 확산 등으로 일부 국

12) 상계글.

가에서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의회 비준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에서 헌법안이 부결될 경우 헌법안 채택은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반대하면 채택이 안되기에 EU가 심각한 내홍과 분열상을 노출할 위험성이 있다.¹³⁾

〈표〉 유럽연합 연표

- ▲ 1950년 5월 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 제안으로 전략자원인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를 제안하며 유럽통합의 비전을 제시.
- ▲ 1952년 슈망의 제안에 찬성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 ▲ 1958년 ECSC는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을 근거로 자본과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럽경제공동체(EEC)로 확대.
- ▲ 1967년 ECSC, EEC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유럽공동체(EC)로 통합.
- ▲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가입(총 9개국).
- ▲ 1979년 유럽의회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선거 실시.
- ▲ 1981년 그리스 가입(총 10개국).
- ▲ 1986년 포르투갈 스페인 가입(총 12개국).
- ▲ 1987년 단일유럽법 발효
- ▲ 1991년 12월 회원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장통합, 통화 단일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을 공식 출범키로 함.
- ▲ 1994년 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 설립
- ▲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총 15개국)
- ▲ 2002년 유로화 통일
- ▲ 2004년 동유럽 10개국 가입(5.1), 25개국 정상회의(6.17), EU 헌법안채택(6.18)
- ▲ 2005년 EU 정상회의(3월)

13) 「중앙일보」 2005년 2월 1일.

Ⅲ. 유럽통합의 과제와 교훈

1. 빈부 격차의 문제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EU 내 빈부 격차도 엄청나게 심해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존 EU 15개국 대부분은 GDP(국내총생산·200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3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들이다. 반면 새 회원국 가운데 GDP 30위권에 드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는 폴란드 한 곳뿐이다. 나머지는 100위권 내에 넓게 포진해 있다. 게다가 새 회원국의 1인당 GDP는 EU 평균의 40% 수준. 이들 국가가 현 EU 회원국들의 경제 수준을 따라가려면 나라별로 20~50년간 걸린다는 전망도 있다¹⁴⁾.

따라서 EU 확대가 이뤄지면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이 가난한 신입생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5월부터 2006년 말까지 새 회원국들은 EU로부터 217억 유로(약 30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존 회원국들은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당장 눈에 띄는 경제적 이득은 별로 없어 불만도 적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동유럽으로만 몰려가는 데다, 그리스·포르투갈 등은 더 못사는 새 회원국들에게 재정지원 혜택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EU가 단일 경제권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좁혀져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새 회원국들은 EU에 가입해도 당장 단일통화인 유로(euro)를 사용하지 못한다. 유로화를 사용하려면 ▲재정수지가 건전하고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2년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빨라야 2006년 여름쯤에나 유로를 도입하는 나라가 10개국 가운데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로선 물가상승률 1.6%, 장기금리 6.4%, 재정적자가 GDP의 0% 수준이고, 공공부채도 GDP의 5.4%에 불과한 에스토니아가 가장 유력하다.

14) 「조선일보」 2004년 4월 27일.

이외에도 EU통합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자국민의 실업문제가 주요문제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2. 동유럽 10개국과 유로화

최근 이어지는 유로화 초강세가 지난 5월 유럽연합(EU)에 신규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의 유로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의 유로 도입은 EU가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¹⁵⁾.

뉴욕타임스는 6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10개국이 EU 공통 화폐인 유로 채택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동유럽 10개국은 지난 5월 EU의 새 회원국이 됐으며, 대부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존의 자국 화폐 대신 유로로 전환할 예정이다¹⁶⁾.

그러나 EU 신규 회원국이 유로를 자국 화폐로 채택하려면 재정적자 감소, 자이금지·물가 안정,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호가보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선결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 중 재정적자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동유럽 10개국의 지난해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7%로, 유로 도입기준인 3%를 훨씬 상회했다. 동유럽 각국은 재정적자를 유로 도입기준까지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평가절상이 동유럽 국가에 '엮힌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할 동유럽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초강세의 유로를 도입하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와 독일 경기 부양을 위해 유로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신규 가입국에는 부담이다. 성장률이 낮고 재정적자가 심각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가 유로를 도입할 경우, 초저금리에 따른 폭발적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 「조선일보」 2004년 12월 8일.

16) 「The New York Times」 2004년 12월 6일. 상계글에서 재인용.

3. 정체성 문제

유럽통합의 심화과정이 거듭되면서, 유럽연합을 과연 무엇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을 국가들 간의 협조체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밀한 제도망을 구축하여 어느 정도의 내적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고유한 통치체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¹⁷⁾.

만일 유럽연합을 '국가의 집합'으로 볼 경우에는 유럽연합을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유럽연합이 하나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실체라고 한다면, 유럽연합의 연구주제는 이제 더 이상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일 것이고, 따라서 국제관계의 이론보다는 비교정치의 이론이 더 적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먼 헉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문제의식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감을 받았고, 그 결과 마틴 로즈, 존 피터슨, 폴 피어슨, 사이먼 벌버 등이 신제도주의나 정책네트워크 등 비교정치학이나 정책학에서 주로 채용되어온 이론과 개념을 사용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통합 연구의 초점이 국제정치학적 관심에 더하여 비교정치학적 질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유럽통합이 국가 간의 협력수준을 넘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으로서, 유럽통합 연구의 동향을 통해 주권국가 중심의 베스트팔렌 체제에 초래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유럽통합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주는 교훈

유럽통합이 동아시아공동체 수립에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유럽을 하나로 묶자는 구상이 맨 처음 제기된 것은 정치적 이유다. 유럽은 20세기 들어서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진원지였다. 이미 20세기 이전에도 전쟁의 역사였다. '국가간의 전쟁이 없는 유럽'을 소망하고 이를 이룩하려는 실천이 오늘의 정치통합체로의 유럽연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

17) 최진우, "EU, 국가의 집합인가, 독자적인 통치체제인가", 『조선일보』 2004년 11월 25일.

의 경우 전쟁의 역사로 비교해 볼 때 유럽에 버금간다. 2차 세계대전이 그러하고, 전후 아시아 지역의 이념·종족·종교적 분쟁과 지금도 북핵문제와 국경·종교·대륙붕 등으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의 건설은 매우 시급한 것이다.

둘째로, 정치적 동기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유럽통합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각 국가간 협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켰다. 이른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경제통합에서 문화통합으로 나아가서 정치통합으로 진전을 거듭한 것이다.¹⁸⁾ 경제상의 이익추구라는 목적의 국제기구적 공동체로 시작하여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옮겨가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작은 경제적 접근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도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통합도 어떤 모델이나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며,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의거 확대·심화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경제적 통합이 가져올 각국과 유럽인들이 겪을 부작용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분야별로 단계적 확대와 통합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전개되었다.¹⁹⁾

셋째로, 유럽통합의 큰 밑거름은 문화공동체의 수립이 병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용되는 유럽의 언어가 43종이나 된다는 점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애초부터 대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의 통합과정에서 문화부분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통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통합기구에서 고유의 언어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이라는 하나의 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 지역문화공동체의 수립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설득하고 여론을 이끌어 냈으며, 국가간 상호연관성을 확대해 갔고, 도시와 각 단체, 개인간의 교류확대와 적극적 뒷받침을 했다.²⁰⁾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통합의 진전여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의 문화

18) 김남국, 전계논문, p. 284.

19) 이규명, "지구화와 유럽통합", 전계서, pp. 376-377.

20) 김명섭, 전계논문, p. 182.

공동체 수립에 역내 국가들의 합의와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이미 각국간의 문화교류는 국가간 외교관계보다도 넓고 깊다. 이를 동아시아라는 문화공동체로 묶어내는 조정과 정책이 뒤따르면 가능한 것이다.

IV.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실과 과제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실

1) 지역통합의 부진

동아시아는 EU의 유럽과 NAFTA의 북미대륙과 비교하여 지역통합의 제도화 수준에서 크게 대비된다.²¹⁾ 동아시아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통합을 향한 의미있는 시도는 ASEAN이라고 볼 수 있다. ASEAN은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 협의체로서, 특히 초기에는 냉전시대에 기인하여 안보동맹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경제협력은 1970년대 중반에 가서야 시작했으며, 그동안 내적 통합을 이끌어 갈 초국가적 기구 성격의 지역통합체 창출에는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여 외적 팽창에 치중해왔다. 현재도 경제-안보공동체로서의 역내 통합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협력 시도는 EAEC(East Asian Economic Caucus, 동아시아경제협의체)를 들 수 있다. EAEC 안은 태동 단계부터 ASEAN은 물론이고 미국, 호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일본도 오랫동안 냉담한 자세를 보였다.²²⁾ 그러나 세계적인 지역화 추세하에서 ASEAN과 동북아시아 주요 3국(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들이 1997년부터 연례 ASEAN 정상회담 기간 중 ASEAN+3 정상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동아시아국가 전부가 참여하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

21) 최영종, 『동아시아지역 통합과 한국의 선택』, 고려대 아연출판부, pp. 73, 2003.

22) 상계서, p. 75.

력체)이 있으나 자유무역화를 이루는 역내 통합체가 아니고 WTO체제 속에서 단일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APEC은 참여국가간의 통합의 심화보다는 단순한 정보 수집 및 교환 차원에 머물고 있고, 조직도 소규모의 사무국 수준이며, 이를 확대·강화시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는 역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역통합은 미미한게 현실이다. 지역통합이나 제도화가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연합과 경제적 공동체로 자리잡고 있는 NAFTA의 경우 역내 무역의존도를 보면 경제 상호의존의 정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통합 초기부터 50% 이상을 유지했고, 세계 무역의 계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NAFTA도 역내 무역의존도를 40%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²³⁾

〈표 3-1〉 EU와 NAFTA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의 무역의존도

(단위: %)

지역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4년
EU-12	51	54	54	53	55	60	58
EU-15	59	31	60	58	60	66	64
NAFTA	37	40	38	34	40	38	43
East Asia	30	29	31	36	38	44	50
ASEAN-6	23	18	14	14	18	17	21
APEC	55	60	57	59	68	69	74

〈출처, Franke(1977,22), 최영종, 상계서(p. 76)에서 재구성〉

그러나 동아시아는 역내 무역의존도로 볼 때 1980년대에 이미 NAFTA의 수준에 다다르고, 1990년대에는 이를 넘어섰다. 높은 역내 무역의 비율로 보면 지역통합의 여건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 진전되지 않은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 있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정치적인데서 찾을 수 있

23) 상계서, p. 75

다. 관련국가들간의 정치이념, 정치과정, 대외정책의 차이 그리고 역사적 관계 등이 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원인설명

동아시아는 <표 3-1>에서 보여주듯이, 경제 상호의존도에서 보면 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통합을 향한 움직임은 오히려 미약했다.

가. 정치적 입장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의 제도화가 미미한 것은 안보위협 상존이나 안보 공동체의 미비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 공동체는 안보 공동체 속에 내재될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²⁴⁾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다르게 냉전체제가 훨씬 유동적이었다. 양대진영 사이에는 제3진영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진영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고, 중소 분쟁이 시사하듯이 공산진영의 분열도 있었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반공국가들이 안보협력관계를 심화시킬 상황의 변화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밖에도 동아시아는 문화적 차이, 경제체제의 차이, 심각한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상호불신은 심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반대가 그동안 동아시아지역의 통합을 막았다고 볼 수 있다. EAEC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국가 주권에의 집착이나 민족주의가 유럽이나 미주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⁵⁾ 유럽이 지역통합의 수준에서 가장 앞서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권국가의 집착 포기과 민족주의의 약화와 큰 관련이 있다.

현재와 같이 북핵위기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관련 국가들의 정책이 조화를 못 이룬다거나, 대만독립 문제가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동아시아에서 지역 통합이나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안보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위의 문제들이 관련 국

24) 상계서.

25) 상계서.

가들의 협력과 참여 속에 불러갈 때 그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한편, 경제국가로서의 중국의 급부상은 동아시아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 온 일본의 독주체제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이 어떤 형태이든 경제적 동맹이나 통합 논의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현재 ASEAN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이 가세하게 될 때, 전략적 목적에서 기인된 경제통합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¹⁾

나. 사회문화적 입장

지역통합은 동질적인 사회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지역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약하고, 또 사회·정치·경제 면 모두에서 국가간의 이질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질성과 다양성이 지역의 제도화와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NAFTA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간의 문제와 차이가 심했으나 지역통합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협상 능력에 따라 극복됐음을 상기하면,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다. 기타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처음부터 이질성이 큰, 너무 많은 숫자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다.²²⁾ 유럽의 경우 초기에 참가국의 숫자가 적었고, 그리고 참가국 사이의 동질성이 높았다. 그리고 지역통합은 지역의 소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먼저 시도되고, 이것이 여타 국가로 확산되면서 성공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시도는 유럽과는 정반대로 아시아·태평양 협력이라는 두 대륙에 걸친 대규모의 협력을 처음부터 시도했다. 물론 이런 노력이 APEC이라는 최초의 정부간 지역협력체를 창출했지만 참여국가들 사이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심하고, 참여국가간 협력과 교류의 심화보다는 외형적으로 팽창에 주력하여 여타의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리고 동아

²¹⁾ 상계서.

²²⁾ 상계서.

시아의 지역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일본, 중국, 한국이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역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협력의 확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요컨대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경제성장은 눈부셨기에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 대해서 지역 단위의 집단행동(즉 지역통합)을 통해서 적응할 필요성이 유럽이나 북미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IMF 위기와 금융 및 통상의 세계화라는 역류할 수 없는 큰 흐름에 직면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대외 대응력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⁸⁾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지역협력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통합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깊게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의 배경

오랫동안 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 속에서 침묵을 지켜 왔던 동아시아에서도 최근, 특히 1997년에 경제위기를 겪은 후에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지역협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충분한 기능적 필요성, 통합을 주도할 지도력, 공통의 위기, 지역 정체성의 형성 등과 같은 지역통합 성공조건을 자연적인 성숙이 가져온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가 가져온 일시적이고—임기응변적인 성격이 더 강한 듯하다.²⁹⁾ 현재 동아시아는 역내에 형성된 통합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어 통합을 추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역내 지도력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더구나 역내 국가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된 동아시아를 강력하게 지향하는 것 또한 아니다. 북핵위기와 대만문제 등 안보불안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사이의 패권경쟁은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28) 김진영, "동아시아모델 논쟁의 극복",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1호, 2003, pp. 97-99.

29) 최영종, 전제서, p. 123.

1) 경제적 위기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무역의 퇴조현상은 한때 세계경제 성장의 파워하우스로 그리고 발전도상국가의 귀감으로 지목되었던 동아시아 지역은 이른바 '정실자본주의'와 낙후된 제도가 초래한 위기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경제정책과 능력에 대한 반성과 재평가를 하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지역적 차원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시급함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경제적 세계화 시대의 특징의 하나는 금융의 자유화 현상이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낙후된 금융질서에 있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자유화된 국제금융체제 하에서 국제적 금융자본의 횡포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국가가 금융위기에 처하면 외환의 유출입 통제가 불가능하여 위기가 찾아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1997년 이전 동아시아 지역은 자본의 급격한 이동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는 지역적 협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여기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환율의 변동과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이 가져다 줄 엄청난 경제적 파도에 대항할 방파제로서의 지역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무역저조 특히 수출의 부진은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재검토케 했다. 수출을 위한 과잉생산과 과잉투자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³¹⁾ 그동안 동아시아의 NIES와 후발 발전도상국가들은 제조업 수출 중심의 일본 모델을 추구하고 이른바 기러기떼 현상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동아시아국가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대체로 다량의 자본재와 기술을 일본에 의존해 온 이들 국가들의 대일적자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위기의 극복과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결속이 중요함을 인식케 했다. 즉,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경제통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국가의 무

30) 김진영, 상계논문, p. 98.

31) 김진영, 상계서, pp. 117-118.

역·투자·전자은행거래·여행 등의 흐름이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을 배제한 지역협력이나 지역통합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³²⁾

2)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 대한 대응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통합이나 협력체의 창설에 가장 큰 방해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반대였다. 미국은 자국이 빠진 동아시아의 지역주의화는 곧 엄청난 국가이익의 손실로 파악하여 적극 저지해 온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수출시장으로서의 미국이 갖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미국이 반대하는 동아시아의 미래변경은 선뜻 시도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97년 경제위기시 취한 미국의 행동은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을 배제한 지역통합을 만들도록 했다. 미국은 94년 멕시코 경제위기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듯이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IMF와 긴밀히 공조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금융원조에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이들 국가의 경제를 자신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려 했다. 이에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에 실망케 됐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간의 협력에 좀더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³³⁾

특히 경제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의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는 대단히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IMF체제 하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경우 엄청난 고통을 안았으나, 서구 채권은행들은 그 어떤 제재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결국 위기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IMF는 불공정한 국제금융체제의 대변적 기구로 보였고, 이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금융기구나 체제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3. 동아시아경제협력체의 실태와 전망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APEC, EAEC, 그리

32) 최영종, 상계서, p. 130.

33) 윤영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국제정치와 한국",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4, p.30.

고 동북아 경제권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상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아세아+한중일' 경제공동체와 양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상술해 보기로 하겠다.

1) 「아세안+한중일」 경제공동체 건설의 시동

2004년 11월 30일 라오스에서 폐막된 '동남아국가(ASEAN)+한중일'정상회담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내년 창설이 합의됨에 따라 논의만 무성해왔던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³⁴⁾

경제공동체에서 정치통합체로 발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전개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로 하여금 공동의 정치·경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간 연합체 결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미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10개국)+3 정상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³⁵⁾ 현재 <ASEAN+3>은 동아시아지역 통합 흐름에 있어 중심에 있다. 참가국, 정체성, 체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면 가장 진일보한 모습이다. 아직 제도화의 시각에서 <ASEAN+3>은 독립된 사무국도 없으며, 지금은 13개 참가국 정부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 위한 다양한 협력 증진 방안을 담은 계획(안)이 이미 다듬어져 있다. 이 계획에 의거 2001년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출범시키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³⁶⁾

특히 아세안 지도자들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아세안을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촉진하여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그 모델로 1960~70년대의 유럽경제공동체(EEC)를 택하는 '발리협약II'를 서명·발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가와 라오스와 같은 세계 최빈국이 공존하고 있으며, 정치제도도 제 각각이며, 종교·역사·문화면에서도 큰 차이

34) 「동아일보」 2004년 12월 1일.

35) 「조선일보」 2003년 10월 8일.

36) 최영중, 상계서, pp. 134-135.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완성된 경제통합체로 가는 데는 40~5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7200억 달러의 역외 시장을 경제공동체로 묶지 않으면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의 도전에 실패하는 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아세안 5억 인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는 시동이 걸린 셈이다.

'아세안+한중일' 13개국이 2004년 라오스에서 열린 13개국 정상회담에서 시동이 걸린 'EU식 동아시아공동체'가 가능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우선 한국과 ASEAN 일부 국가들만이 적극적이고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 확대와 영향력 제고에 보다 관심을 가져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주의적 경쟁이 심한 데다가 미국의 방해까지 고려하면 간단히 풀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역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동아시아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이번 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2)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가. 배경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을 가속화시켰다. 즉 금융위기의 역내 확산과 환율변동의 불안정성 증대, 한나라의 급속한 평가절하가 역내 다른 국가의 수출경쟁력 악화를 초래했다.³⁷⁾ 또한 역내 금융협력 및 거시경제정책 협조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미주 및 유럽에서는 강력한 지역주의가 등장하고 있으며, 역내 APEC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망이 WTO체제 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한 지역통합적 무역정책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한국은 1999년에 한-칠레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은 2000년 10월 싱가포르와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일본이 최초로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발표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다. 한달 이후 미국은 미-싱가포르 FTA 협정을 맺었으며, 중국은 중-아세안 FTA를 제의했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대만 등은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효과, 수

37) 이장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 협력 가능성", 신아세아질서연구회주최 「아시아의 장래는 있는가」 세미나 발표문, 2004, pp. 7-8.

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치열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대에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 집중으로 국내 유입 감소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관세율 인하, 통관절차 및 규제 통일 등 무역·투자원활화 등에 대해서 각국의 경제계의 요구사항이 증대되었고, 세계적으로 FTA 추진 추세에 발맞추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은 대응 성격의 FTA 추진(competitive liberalization)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나. 실태

가. 중-아세안 FTA

2001년 11월 중국의 주룽지 총리와 아세안 국가 지도자는 향후 10년 이내에 중-아세안 FTA를 건립할 것을 발표했다. 중국은 최초의 FTA 대상국으로 아세안을 선택했으며, 중국은 정치적 지도층의 합의만 도출되면 매우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제이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의 중국위협론을 불식하려는 의도와 함께 역내 안정과 협력-교류 분위기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ASEAN 국가와 ASE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을 체결하여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상에 참여한 것은 중국이라는 경제대국과의 협상이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함을 의미한다.³⁸⁾

아세안 국가 중에서 중-아세안 FTA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정도이다. 중-싱가포르 FTA가 양자간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중국이 아세안을 블록이 아니라 보다 실용적인 양자간 FTA 방식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2001년 10월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중-아세안 FTA에 의하여 중국은 3%, 아세안은 0.9%의 성장률 증가효과가 있으며 교역은 5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제대국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과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과 아세안 국가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지대로는 경제블록으로

38) 이장규, 상계글 p. 14.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아세안 FTA

일본은 ASEAN의 역내 최대 무역파트너이면서도, 중국에 빼앗긴 외교적 주도권을 되찾는데 전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아세안과의 FTA 협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중국이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세안 지역에 이전에 이미 수많은 투자를 하여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생산기지 네트워크를 지속·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³⁹⁾ 물론 아세안 지역은 노동비용 측면에서는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지만, 일본기업이 이미 구축한 부품조달 네트워크, 양성한 인적 자원 등에서는 아세안 지역이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아세안 FTA 발표 2개월 후인 2002년 1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일-ASE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제안했다. 2002년 1월의 일-싱가폴 FTA 체결과 같이, 양자간 FTA의 방식을 선호. 일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과의 FTA 협상을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입장에서도 경제구조가 경쟁적인 중국보다는 경제구조가 보완적인 일본과의 FTA가 손실이 적다라고 판단된다면 양자간 FTA가 비교적 실용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아세안 국가와 양자간 협상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FTA 보다는 무역을 원활화하게 추진, 당사국간 제도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FTA 협상을 지향하고 있다. FTA 추진의 문제점은 사실상 대부분의 일-아세안 교역이 경제특구 등을 통해서 무관세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FTA로 인해 얻어질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FTA 반대세력 역시 FTA 추진의 장애요인이다. 해외노동력 유입에 대한 반대정서 및 농업개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의 개방,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노동력 유입 등의 문제가 FTA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⁴⁰⁾ 아울러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간 FTA 혹은

39) 이장규, 상계글, p. 16.

40) 이장규, 상계글, p. 17.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간에 볼 때 실용적인 추진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각각의 FTA가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역내에서 상이한 FTA를 양산할 수 있는 게 문제이다.

다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FTA)타결

2004년 11월 29일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됐다. 아직 서명절차가 남아있고, 한국의 경우 국내비준이 기다리고 있으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교역량을 늘리게 되며, 한국은 동북아시아 허브를,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허브를 지향하기에 두 나라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V. 맺음말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 출발한 유럽통합의 시작은 지난해 2004년 동유럽회원국 10개국에 회원국이 되면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고, 25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EU헌법안을 확정했다. 이제 EU는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인구 4억 5000만에 GDP 10조 4000달러로 2억 인구에다 GDP 10조 6000억 달러의 미국에 견줄 경제적 힘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헌법안 확정으로 고유의 영토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진 25개 유럽의 주권국가가 EU라는 초단일 국가로서 외교안보정책을 펼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2006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EU헌법에 대한 회원국들의 국민투표가 2005년 대부분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실업문제, 빈부문제 등도 대두되고는 있으나 EU는 되돌릴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EU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아직 첫 걸음도 내디딘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각국이 지닌 역사적 배경·경제 발전의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중심중심이 되어 제기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고 분쟁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 역사를 이루고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을 모범케이스로 제기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동아시아는 우선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과 대만사이의 긴장도 심각하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긴장을 해소하자는 평화의 걸모습과는 달리 역내 각 국가가 마치 군비경쟁을 벌이듯 과도한 군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중국·남북한·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비확장에 나서고 있어 동북아는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역사왜곡문제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튀어나와 비생산적인 민족주의적 논란이 있고 영토문제도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상호불신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공동체의 모색은 고사하고라도 국가수준에서의 상호불신제거의 노력이 시급하다. 그래도 한자문화권에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적·문화적 교류가 확대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이 Win-Win임을 자각하는 상황의 도래는 지극히 고무적이다. 경제협력이 공동체 수준으로 발전하기에는 시간이 요하겠지만 양국간 FTA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에서 추진되는 양자간 FTA의 확산이 전망되지만 단기간에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통합으로 진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이유는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이 대치하는 정세에 기인한다. 일본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2인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지 않을 것이고, 중국 또한 일본 지배질서에 2등 국가에 만족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강대국의 양보할 수 없는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는 한 동아시아에 장기적으로 정치통합체의 형성은 물론이고 가장 가능한 경제통합체의 형성도 어렵다. 유럽의 통합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유럽을 지배해왔던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더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음을 자각하고 공생의 길을 찾게 된 데서 가능했던 것이다⁴¹⁾. 따라서 지금과 같은 중·일 관계의 극적 전환만이 동

41) 이상우, 「21세기 아시아 신질서와 한국」, 『신아세아』 Vol. 11, No. 3, 신아세아연구소, pp. 13-15, 2004.

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연합체의 출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지역통합을 위해 주력할 일은 국가간 FTA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특히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 양국간 FTA를 이룬다면 불편했던 과거의 정치적 관계를 벗어나 지역협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